광주교도소 5·18 암매장 여부 오늘 판가름

매장지점 1.5m 추정…1m 굴착 유골 없어도 흙색깔로 판별 가능 미확인 배관 3개 지하수관 확인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이르면 9일께 암매장 정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조사를 주관하는 5·18기념재단은 문화재 발굴방식을 활용한만큼 유해가 발견되지 않더라고 최소한 시신 암매장 흔적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5·18기념재단, 5월 단체 등은 8일 "현재 광주교 도소 내 암매장 발굴 구역(길이 117m·폭 3m) 가운 데 동쪽 30m 구간은 1m 이상 굴착, 기반토(基盤土) 까지 도달했다"고 밝혔다.

재단 관계자들은 지난 6일부터 발굴을 시작해 이 날까지 지표 아래 1m 이상까지 파들어가는 등 작업 상황으로 볼 때 이르면 9일에는 암매장 정황을 확인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발굴지역 1.5m 지점에 희생자들이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최소한 암매장 정확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존 발굴 방식에 비해 시일이 상당히 소요되더라도 문 화재 발굴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5·18재단은 117m를 10m씩 12개 구역으로 나누고 하루에 1개 구역씩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조사가 중장비 를 동원해 3~4일 밖에 걸리지 않았던 점에 비하면 느린 속도다.

문화재 발굴 방식은 시신 매장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땅을 덮고 있는 겉흙을 제거하면 낙엽 등이 섞이지 않은 기반토(基盤土·바탕흙)가 나온다.

발굴실무를 맡고 있는 정일 대한문화재연구원 실 장은 "땅을 파고 다시 덮는다면 기반토에 겉흙이 섞 여들어가고 색깔은 검은빛을 띤다"고 설명했다. 교 도소의 기반토는 황토색이므로 암매장을 했다면 흙 색깔로 쉽게 판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발굴 작업자들은 지난 6일부터 호미나 작은 삽으로 발굴 구역을 긁어내다시피 하며 파들어 가고 있다. 8일에는 지하 1m 지점에서 생활쓰레기가 나오며 암매장과 상관없이 과거 땅을 팠던 흔적을 발견하기도 했다. 이때 생활쓰레기 주변 흙은 어두웠다.

현재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구역은 5·18 당시 교도소에 주둔했던 3공수여단 김모 소령이 지난 1995년 검찰조사 때 제출한 약도와 진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김 소령은 "시신 12구를 2구씩 가마니에 싸서 북쪽 담장 3m 떨어진 지점에 묻었다"고 진술했지만 5·18 이후 시신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5·18재단은 애초 목표했던 지하 1.5m 지점의 기 반토를 통해 김 소령이 진술한 암매장 구덩이 6개 흔적을 찾고 이를 발판으로 유해를 찾을 예정이다.



<u>조심</u>... 조심... 대한문화재연구원 발굴 인력이 8일 광주시 북구 문흥동 옛 광주교도소 북쪽 담장 주변 에서 5·18 암매장 추정지 발굴 작업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특히 지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광주시가 세차례에 걸쳐 진행한 발굴 조사에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방침이다. 5·18 직후 공수부대원들이 다시 광주를 방문해가매장한 시신을 발굴해 갔다는 증언이 최근 공개됐다는 점도 고려했다.

한편, 지난 6일에 이어 이날 오전 지하 1m 지점에서 또다시 미확인 배관 3개가 발견되며 작업자들을 긴장시켰지만 법무부 확인 결과 지하수를 교도경비대 관사 등에 공급했던 관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어 재단은 이를 절단하고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양래 5·18재단상임이사는 "발굴 지역에서 배관이 잇따라 발견됐지만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암매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9일 중 기반토 분석이 완료되면 1차 조사 지역의 암매장 정황은 확인할수 있을 전망이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교대 16일 총장후보 재선출 절차

교육부 후보 재추천 요구에 장기화 교수회의서 선출방식·일정 등 논의

13개월째인 광주교육대학교 총장 공백 사태가 교육부의 총장 후보자 재추천 요구로 더욱 장기 화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교대는 오는 16일 전체 교수회의를 열어 총장 후보자 선출과 관련한 제도 개선과 일정 등 을 논의하기로 했다.

총장 선출 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 수렴이 있을 예정이다.

교수회의에서 총장 후보 선출 등에 대한 일정 등이 확정되지 않으면 총장 공백 사태는 더욱 장 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광주교대 관계자는 "교수회의에서 제도 개선과 일정 등을 결정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총장임용 후보자를 선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최근 총장임용 후보자로 추천한 2명의 교수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후보자 재추천을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각각 1·2순위로 뽑혀 후보자로추천됐다. 당시 교육부는 별다른 설명 없이 재추천을 요구했지만, 총장임용 추천위원회가 이에 대해 대응하지 않는 사이 13개월이 지났다. 새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가 총장 후보 추천을 요구하자 광주교대는 후보를 새로 뽑지 않고 두 교수를지난달 다시 추천했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도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 '외면'

10곳 중 1곳만 법적 비율 지켜

전남도 산하 출연·출자기관이 장애인 의무 고 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전남도의회 강성휘 의원(국민의당·목포1) 이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전남도 출연·출자기 관의 장애인 고용 현황'에 따르면 법적 비율로 정 해진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킨 기관이 10곳 중 단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0인 이상 상시 고용인을 두는 기관 10곳 중 전남 신용보증재단(3.2%)을 뺀 9곳이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기관별로는 생물산업진흥원 2.8%, 강진의료원

2.3%, 순천의료원 2.0%, 전남개발공사 1.7%, 전 남테크노파크 1.4%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남연구원, 전남녹색에너지연구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남문화관광재단 등 4곳은 장애인을 단 1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50인 이상 상시 고용인을 두는 기관은 장애인을 3.2%이상 고용하도록 한 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강성휘 의원은 "최근 타 시·도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직원들을 위한 안마사를 고용하는 사례도 있다"며 "장애인에게 근로는 생존과 직결된 권리이므로 고용 확산에 앞장서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조두순 출소반대' 靑 국민청원 24만명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이 청원에 동의한 인원은 7일 20만 명을 돌파했고, 8일 오후 4시 현재는 24만여 명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한 초등학생을 납치해 강간 상해한 혐 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예정대로라면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둔 상태다.

조두순이 피해 어린이 신체 일부의 기능을 영구적으로 잃게 했는데도 재판 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형이 12년으로 선고되자 당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인 바 있다.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에 30일간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각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등 책임 있는 당국자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기로 했다. /연합뉴스

